

분단국가의 통일기구



1969. 8



목 차

1. 우방국가	3
가. 서독의 통일기구	3
나. 자유중국의 통일기구	11
다. 월남의 통일기구	15
2. 북괴 및 공산국가	17
가. 북괴의 대남공작기구	17
나. 동독의 통일기구	23
다. 중공의 통일공작기구	24
라. 월맹의 통일공작기구	26
3. 통일문제기구의 비교	31

1. 우방국가

가. 서독의 통일기구

서독의 통일문제 전담기관인 전독문제성 (Bundesministerium für Gesamtd Deutsche Fragen)은 연방의회(하원)의 「전독 및 베르린 문제 위원회」와 범국민적 통일운동체인 「통독촉진위원회」와의 유기적인 3위 1체를 이루어 조직적이고 방대한 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대 「유엔」관계 및 동구라파 관계를 관장하는 의무성의 제2 정무국 통일과와 연방정보국의 획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1) 전독문제성 기구

전독문제성의 기구를 보면 연방정부의 전독문제상 (베너 H. Wehner) 밑에 행정업무와 통독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제1국(10개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공보업무를 수행하는 제2국(12과) 그리고 베르린과 전독문제를 취급하는 제3국(10과)이 있고 특히 제1국 산하에는 방대한(24과) 도서 및 각종자료를 관리하고 각 분야에 걸친 단계적이며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전독문제문서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전독문제상의 자문기관으로서 저명한 국내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통일문제연구위원회」는 정치문제를 제외하고 동·서독의 통일을 전제로 동독과 구 독일영토의 경제적, 사회적제도와 그 발전상황을 조사, 분석하며, 장차 통일이 실현될 때를 대비하여 제반 정책적인 문제를 건의하는 기관이다.

동 연구위원회는 「국민경제조사분과위원회」, 「농업분과위원회」, 「상공분과위원회」, 「사회문화위원회」, 「교통·채신분과위원회」, 「재정분과위원회」, 「경영회계분과위원회」의 7개 분과위원회별로 동·서독일을 단일국가 경제권으로 보고 주로 동독의 산업, 국민소득, 농업분제등을 비롯하여 물가분제, 교육, 사회, 노동분제, 재정, 금융, 교통, 채신, 산림 등 각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그 결과들 연방의회의 회기 말에 보고한다. (1969년 현재 제5차 보고서 제출)

연간 예산 약 1억불(68년도)과 330여명의 인원(문서실 제외)으로 운영되는 「전북분제성」의 주요 임무와 기능은,

- (가) 동·서독간의 상호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제반 정책의 수립
- (나) 동·서독간의 상호교류 촉진
- (다) 동독 및 동부 국경선 분제의 취급
- (라) 동독 실정조사 및 정보수립
- (마) 동독 피난민 및 정치추방자 등의 구호 및 대책
- (바) 독일 국민의 사상 계몽
- (사) 서「베르린」의 관리
- (아) 통독의견과 통독후의 개반 정책 수립 등이다.

(2) 통독촉진위원회

1954.6.13에 창설된 「통독촉진위원회」는 서독 내의 각 정당, 사회단체, 교수, 공무원 등 각계 각층의 인사들을 망라하고 있는 전국적인 민간통일문제연구 및 운동기구로서 총재, 사무총장 밑에 최상단과 「특별정치위원회」가 있으며 12개 「전문위원회」와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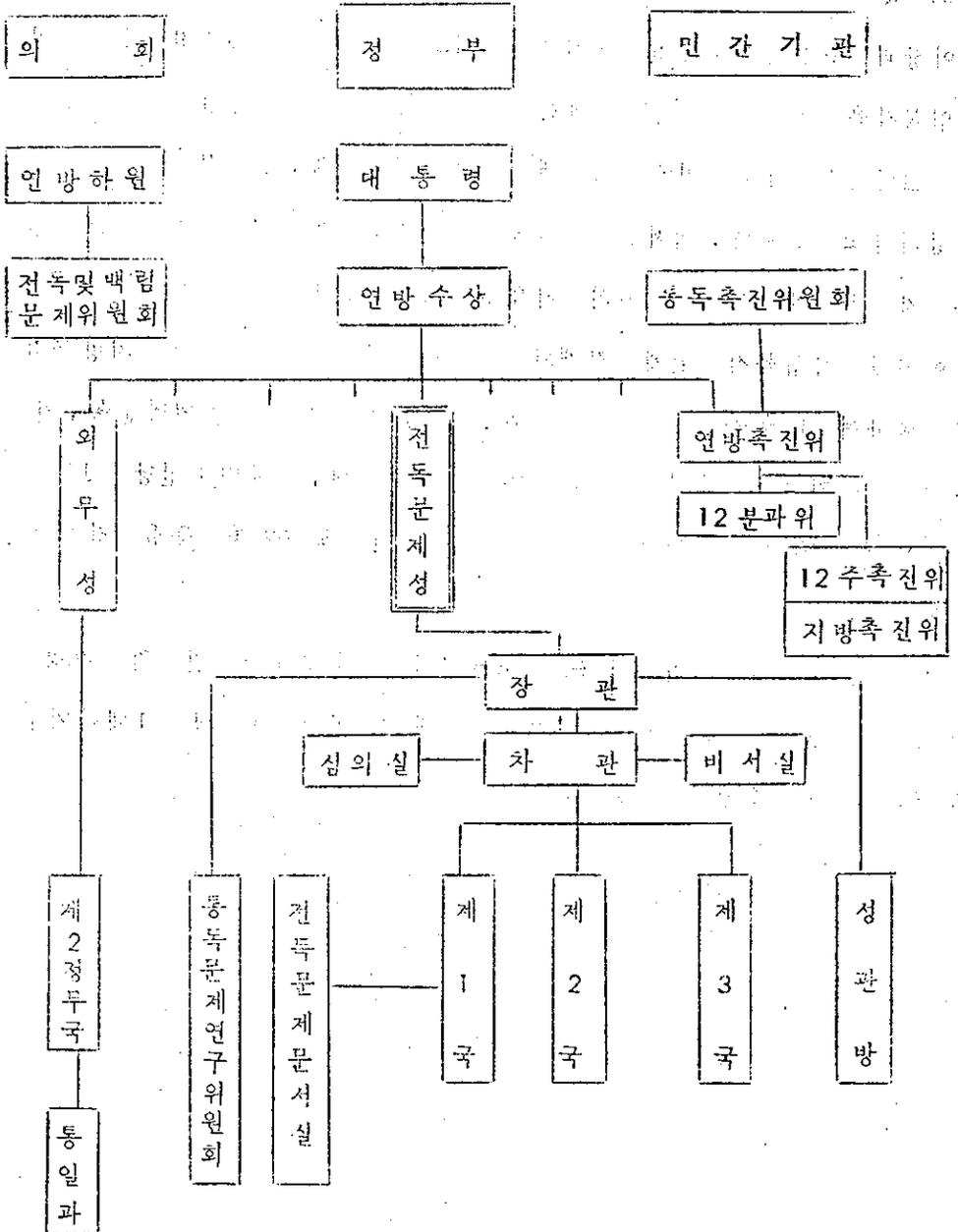
계의 「주족전위원회」 그리고 2천여개의 「지방촉진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통독촉진위원회」의 사업목적은 독일 통일의 수혜는 독일 국민이며 「독일은 분단될 수 없다」는 구호 밑에 국민에 대한 계몽활동, 동·서독 국민의 통일의식고취, 국내, 외적인 통일촉진 호소, 동독 피난민의 구호사업 등 각 분야에 걸쳐 정부의 사업을 협조하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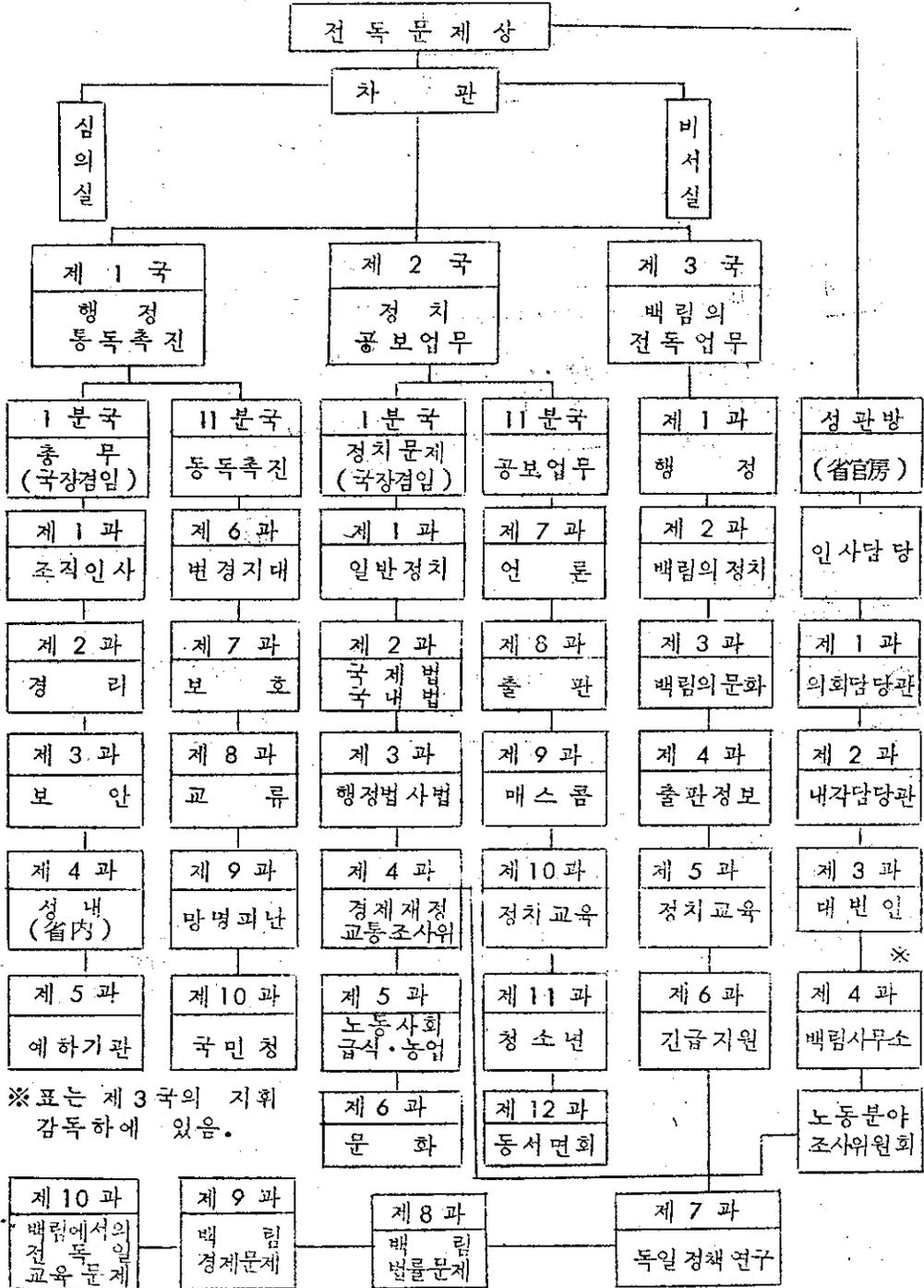
이러한 사업목적 밑에 전개되는 주요 활동은 전국적인 지방조직을 통하여 「동독의거의 날」(6. 17일 자유의 날) 기념운동, 자유와 민족자결을 상징하는 「뱃지」착용 장려, 「국민 1인당 1페니니」(약 70전) 「기부」를 위한 전국적인 모금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위한 자금은 노동조합, 고용주조합 및 각 지방기구에서 약출되는 기금과 1958년 이래 「국민 1인당 1페니기부」 모금운동으로 충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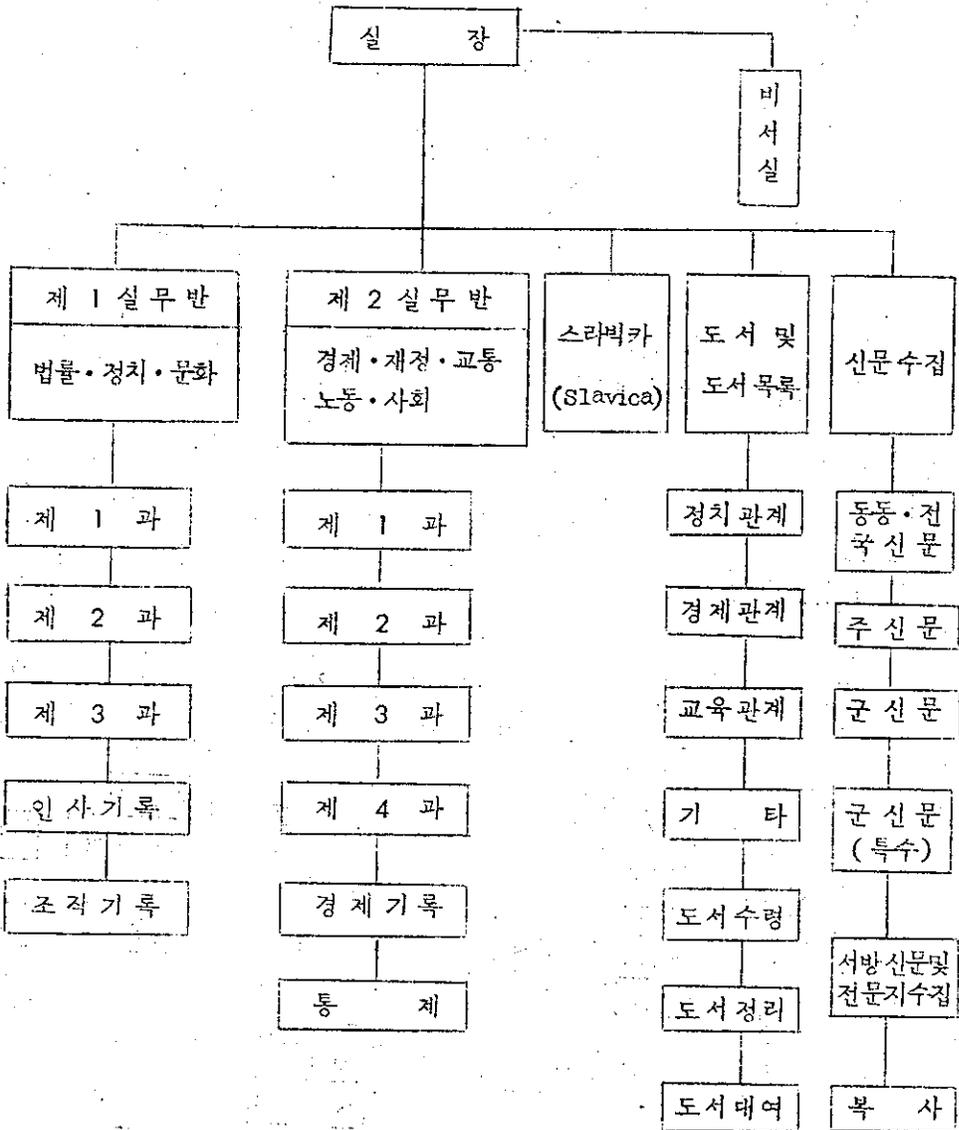
독일연방공화국 통일기구



전 독 문 제 성



전독문제 문서실



나. 자유중국의 통일기구

(1) 광복대륙설계연구위원회 (光復大陸設計研究委員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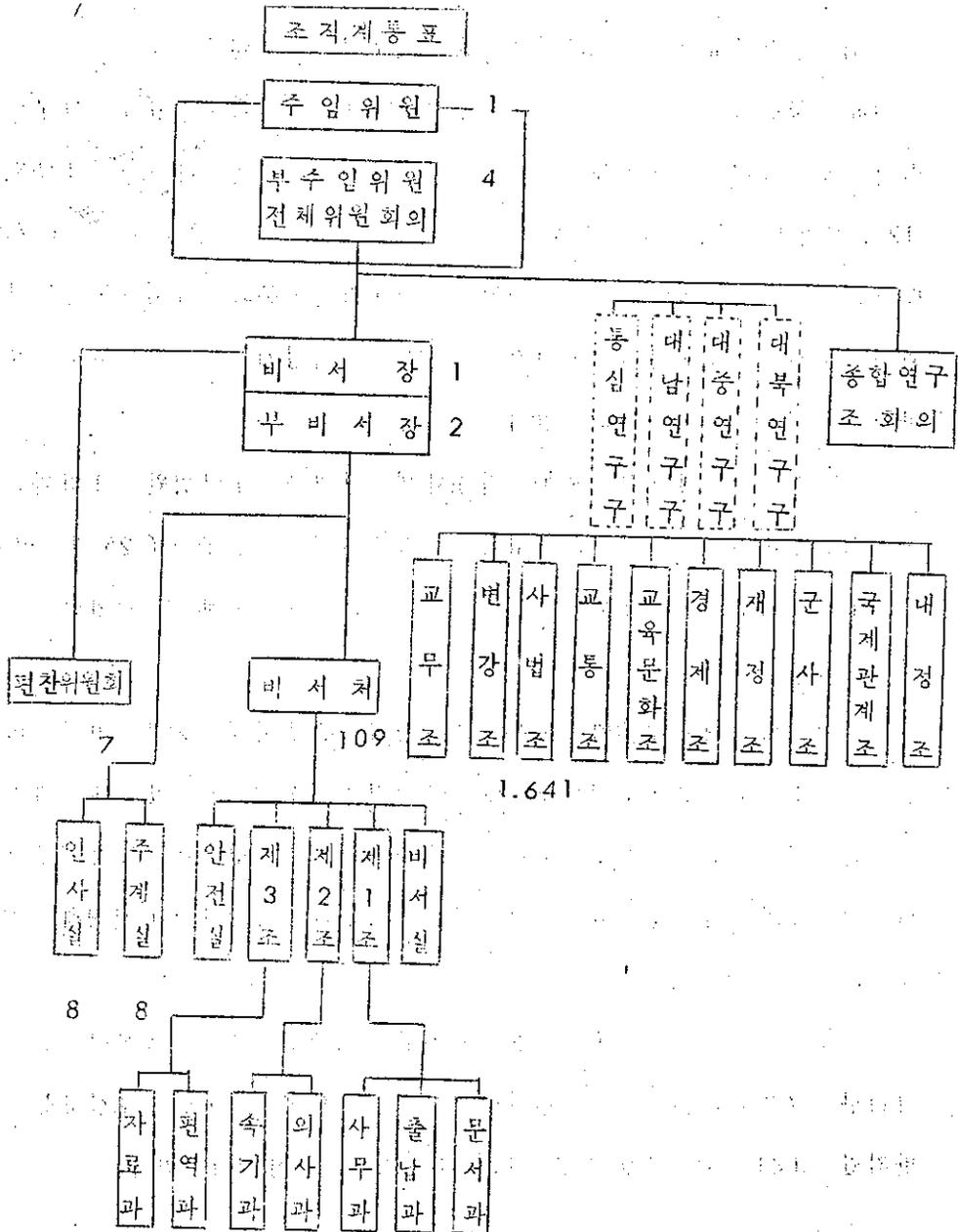
자유중국은 상실한 대륙을 되찾기 위한 계획과 방안을 연구할 목적으로 일찌기 「광복대륙설계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1955. 5. 19. 설치법 공포) 본토수복을 위한 반공전(反攻前), 반공시(反攻時), 반공후(反攻後)에 관련된 정치·경제·문화·사회·군사 등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여 총력전의 역량을 배양케 할 수 있는 각종 방안과 정책을 수립하고 건의하여 왔다.

동 위원회는 장개석 총통 직속하에 장관급 주임위원 1명과 부주임위원 4명을 두고 그 밑에 「3개지역 연구부」(25개 연구조와 1개 종합연구조)와 1개 「비서처」 그리고 1개 「편찬위원회」가 있다.

그리고 비서처(秘書處)에는 비서장과 부비서장(2명) 밑에 비서실과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안전실(安全室)이 있는데 제1조 밑에는 문서과, 출판과, 사무과가 있고 제2조 밑에는 의사과(譯事科)와 속기과가 있으며 제3조에는 자료과와 편역과(編譯科)가 있다.

그리고 부비서장 직속하에는 주계실(主計室)과 인사실이 있다. 이러한 조직을 운영하는 인원을 보면 비서처 직원을 포함하는 일반 반직원 141명과 연구위원 1,64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복대륙실계연구위원회



(2) 연구사업

이상과 같은 조직과 인력으로 「광복대륙실계연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분야는 정치·경제·군사·사회·교육·문화 등에 걸쳐 대륙수복에 관련되는 정책, 제도, 조직, 관료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활동을 단계별, 내용별로 보면.

(가) 반공전 단계 (反攻前段階) 에서는 본토 수복을 위한 전력 준비계획을 충실케 하는 연구를 위주로 하고 있다.

(나) 반공시 단계에서는 본토 반공시 수복지역에 대한 군정에 관한 연구를 위주로 하고 있다.

(다) 반공후단계에서는 본토 수복후의 제반분체와 정책을 연구한다.

이러한 단계별 연구를 함에 있어서는 각단계마다 내정조, 국제관계조, 군사조, 재정조, 경제조, 교육문화조, 교통조, 사법조, 교무조의 10개조를 두고 있고 이를 종합하는 종합연구조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를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가) 손문(孫文)의 삼민주의(三民主義)와 그 가르침 (나) 헌법정신 (다) 총통의 지시 (라) 중국본토의 공산도박들에게 행할 조치와 인민구제 등의 4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연구분담을 대북구(台北區), 대중구(台中區), 대남구(台南區)의 3개 지역으로 나눈 이외에 대만을 제외한 금문(金門), 대동(台東), 화련과 해외에 거주하는 연구위원들로 구성된 동산연구반이 별도로 있고 또 특별연구활동으로서 비정연구실(匪情研究室)을 두고 있는데 이 곳에서는 중공의 군사, 변강, 재정, 교통,

당무(党務), 국제관계 및 인민공사 등 20개 분야에 걸친 특수연구활동을 하고 있고 비정연구라는 일간지를 발행하고 있다. 비정연구실의 연구위원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과는 별도로 62개의 전문소조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이 기관의 주요임무는 국경분계, 무적군인 취업알선, 수복후의 외국인 재산처리, 전투지역에서의 정부처리 등에 관한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함에 있다.

이상과 같은 단계별, 분야별, 지역별 연구를 추진함에 있어 「광복대륙설계연구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연구과제를 보면,

(가) 반공전 단계

- ① 대만을 공고히 하여 대륙수복을 달성하는 총동원 방안
- ② 대만을 건설하여 동원준비를 서둘러 반공수복을 유리하게 하는 방안
- ③ 반공준비를 서둘러 사정변화에 적응하는 방안
- ④ 반공수복의 기운을 파악하고 전력량을 발휘하여 괴뢰정권을 타도하는 종합방안
- ⑤ 대륙에서 돌격공작을 증강하여 반항혁명을 유발시키는 방안

(나) 반공시 단계

- ① 수복지구에서 군정실시 방안
- ② 반공시 필요에 따라 수복지구의 군정실시안을 치급히 수정하는 방안

(다) 반공후 단계

① 대륙수복후 국가건설의 종합방안

② 수복후 제도와 정책의 현대화를 위한 종합연구 방안

(라) 기타 특수과제 등으로 되어 있다.

(3) 사업실적

1954.11.1 본 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1969.6.31. 현재 까지 총 934건의 연구과제를 완성하였으나 이 연구과제 수는 시간이 경과하고 사정이 변화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중국 본토 인민공사 제도가 생기자 295건, 중공 총노선 및 대약진 운동이 일어나자 72건, 그리고 월남전이 발생하자 84건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완성된 934건중 정부가 참고로 채택한 것이 359건이며 이중에서 각 부처가 채택한 과제의 예를 보면 내청조(內政組)가 연구한 「시정개혁계획안」, 「총동원 시에 있어서의 정치혁신안」 등이며 「국제관계조」가 연구한 「중미공동방위조약의 발효후 중미관계를 공고히 하는 방안」, 군사조가 연구한 「적정판단과 공산군의 전략전술 연구」, 재정조가 연구한 「조세개혁안」, 변경조가 연구한 「변경지역에 거주하는 인사의 단결방안」 등이다.

끝으로 동 위원회의 운영예산은 비밀에 붙여지고 있어 구체적 액수는 분명치 않으나 1964년도에는 동 위원회 전체예산의 약 71%를 연구비에 충당하였다고 한다.

다. 월남의 통일기구

1959년부터 월남 전역에서 「베트콩」의 조직적인 「테러」 활

농이 전개된 이래 월남은 오늘날까지 국가의 총역량을 오직 전쟁 수행에만 경주하는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므로 월남은 통일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한 바는 없고 현실적으로 정부의 통일정책은 대 「베트콩」 전쟁수행정책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보겠다.

그러나 과거 「고·딘·디엠」 정권때에 저명한 국내 정치가·법률가 및 학자 18명을 핵심으로 한 60여명의 자문위원회가 대통령 산하에 설치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통일문제도 비공식으로 연구하고 논의한 일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9.5.25. 「티우」 월남대통령의 주도하에 결성된 「국민사회민주전선」도 대공투쟁을 주목적으로 국내 우익정당을 규합한 정치조직에 불과하며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체는 되지 못할것 같다.

2. 북괴 및 공산국가

가. 북괴의 대남공작 기구

북괴의 대남적화통일공작은 외관상으로 보면, 노동당·행정부 그리고 정당·사회단체의 「3위1체」의 기구를 형성, 수행하고 있는 듯이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노동당 중앙위원회에 소속하는 비서국의 「대남사업총국」이 중심이 되어 제반 정책을 당에서 결정하여 이를 행정부 각기관 및 그들이 발하는 「정당·사회단체」에 지시하고 그 결과를 철저히 조정·감독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대남사업총국」은 북괴의 대남적화통일공작을 수행하기 위한 사실상의 정책결정기관이며, 행정부 각 부처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재북남한인평화통일촉진위원회」 등 외곽기관은 당의 정책을 집행하는데에 불과하다.

즉 행정부 처중에서 「외무성」은 외교활동 및 대「유엔」활동등을 통하여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외교적 공작을 수행하고 있으며 「민족보위성」은 무력에 의한 대남적화통일정책·전투·특수정찰활동등을 집행하며 「사회안전성」은 「재일조선인지도부」를 직접 장악하고 재일교포를 통한 정보수집, 대세적인 사상동향감시 등 통일정책 수행의 여건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부준 각성의 제1부는 남한에 관한 해당분야를 연구하고 장차의 남한접수준비, 접수요원의 양성등을 주요임무로 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각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3명중 1명은 남한 출신자를 임명하고 남한접수를 위한 행정간부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이다.

형식상 범사회적 통일문제연구 및 운동기관으로써 1949.6.25
결성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과 1961.5.13에 결성된 「조국평화
통일위원회」는 마치 북한내의 각 정당·사회단체들로 구성된양 통
일전선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노동당의 선전기관에 불과하며
또 북한내의 남한출신자들로 구성된 「재북남한인평화통일촉진위원회」도
이것이 마치 남한인민을 대표하는 기관인듯 행세하고 있으나 내용
적으로는 당의 지령에 움직이는 선전기관에 불과하다.

북괴의 대남공작을 총괄하고 있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대남사업
총국」은 1961.9. 제4차 전당대회에서 종래의 중앙당 「연락부」
에다 내무성 반탐정치(反探偵処), 민족보위성 특수정보부를 통합
하여 새로 개편 발족한 것이며 초대 총국장에 이효순이 임명되었
다가 1967.3. 숙청되고 후임에 허봉학이 취임, 현재에 이르고 있
다.

1961년 이후 대남공작의 일원화 및 강화를 목적으로 각 기관
의 기능을 통합하고 단일기구로 대남공작을 해오던 「대남사업총국」
은 1962년 10월경부터 「사회안전성」의 기능을 흡수하여 「재일조
선인지도부」를 직접 관장하고 일부를 통한 우회공작을 담당토록
하였고 1965년에는 「민족보위성」의 「정찰국」, 「집단군 도보정찰
소의 대남공작기능을 흡수 확장시켜 이를 직접 관장함으로써 후방
의 무장투쟁과 대동월북(帶同越北)·전선도발·군사정찰 등의 업무
를 수행토록 하였다.

「대남사업총국」의 기본임무는 : (1) 대남공작기관의 총괄 (2) 대남
공작의 집행·조정·감독, (3) 남한지하당조직, (4) 남한의 정치·

경제·사회·군사 등 제반 경제의 조사·분석 등인데 이를 수행하는 각 산하 부서별 임무는 대략 다음과 같다.

(가) 연락부

대남지하당공작의 주무부서인 「연락부」는 수개의 참모부서의 외 「서울시 및 각도 담당과」, 「695 군부대」, 독립밀봉「초대소」(招待所), 「안내소」등의 공작부서로 조직되어 있다.

「서울시 및 각도 담당과」에서는 남한의 관할지역내 지하당공작을 책임 수행하며 「695 군부대」는 대남공작에 종사할 간부와 조별밀봉교육(組別密奉教育)에 의한 공작원을 양성하고 있고 독립밀봉「초대소」에서는 개별밀봉교육에 의한 공작원을 양성하고 있다. 그리고 안내소는 3개의 「해상안내소」와 2개의 「육상안내소」를 통한 남파 공작원의 호송임무를 띠고 있다.

(나) 문화부

문화부는 대남심리전을 주관하는 부서로서 그 산하에 「출판사」, 「평양제 1·2 방송위원회」, 「조국통일신문사」, 「남반부연구소」등의 사업부서를 거느리고 있다.

즉 「출판사」는 대남선전을 위한 위장물(偽裝物), 전단(傳單) 등 심리전 간행물을 발간하여 남한 및 제3국에 발송하고 있고, 「평양제 1 방송위원회」는 대남심리전 방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국통일신문사」는 「조국통일신문」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남심리전 공작은 남한의 정치·경제·사회·군사 등 각 분야에 걸친 정세분석과 판단기능을 수행하는 「남반부연구소」의 협조와 지원을 받고 있음은 물론이다.

(㉔) 정보부

정보부는 남파공직원 및 해외공직원으로 부터 수집되는 제반 첩보들을 분석·평가해서 이들 대남공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하여 각 부서에 배포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보부의 활동은 각 부서의 대남공작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행동지표로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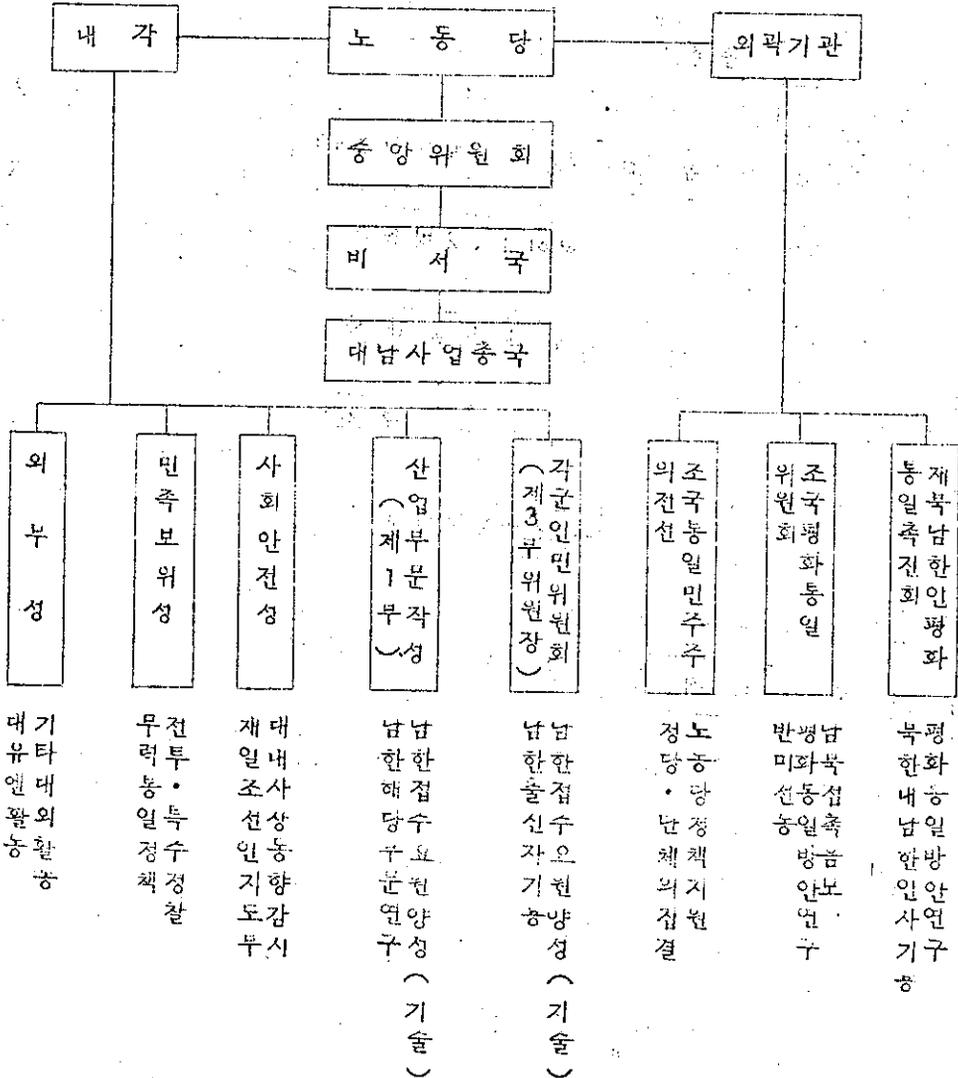
(㉕) 조사부

「조사부」는 특정한 공작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대내적으로 북한에 거주하는 남한 출신자의 신원파악, 동향조사등을 임무로 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남한주민 및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의 신원파악, 동향조사 등 주로 인원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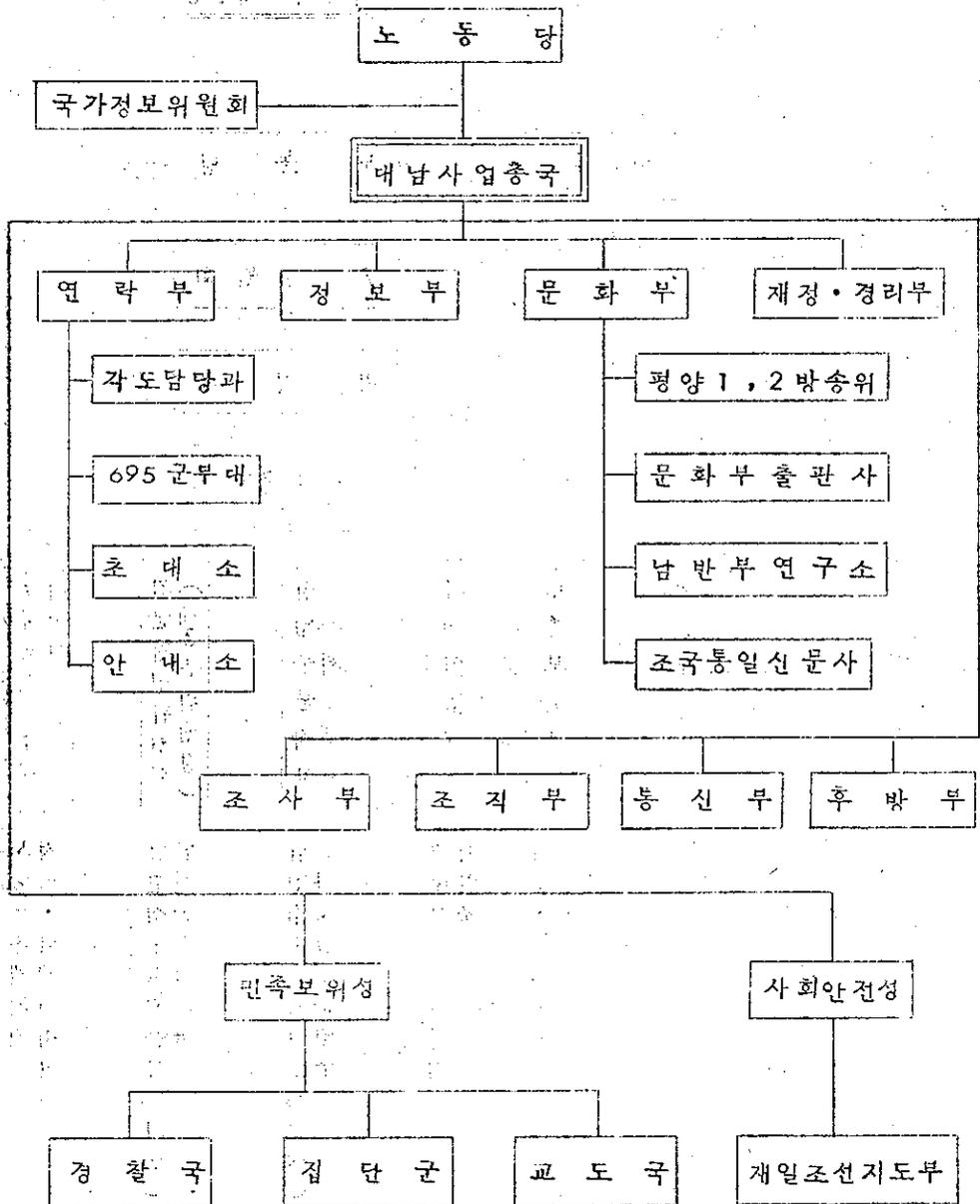
이와 같은 각 공작부서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타 부서를 보면 대남공작에 소요되는 자금을 관리하는 「재정경리부」, 인사 및 조직사업을 수행하는 「조직부」, 공직원에 대한 통신훈련과 해외 및 남파공직원과의 통신연락을 유지하는 「통신부」 그리고 대남공작에 필요한 물자의 획득·저장·관리 및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후방부」 등 4 개의 지원부서가 있다.

이상과 같은 「대남사업총국」의 공작기능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당 「국제부」, 「대외문화연락위원회」, 국제부역축진협의회 「조선중앙통신」, 해외주재공관, 「재일조선인총연맹」, 「국제공산주의선선」, 기타 각종 친선협회등의 보조기관들이 공산진영과 중립국가 의 정보수집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북괴의 내남공작기구



북괴 대남사업총국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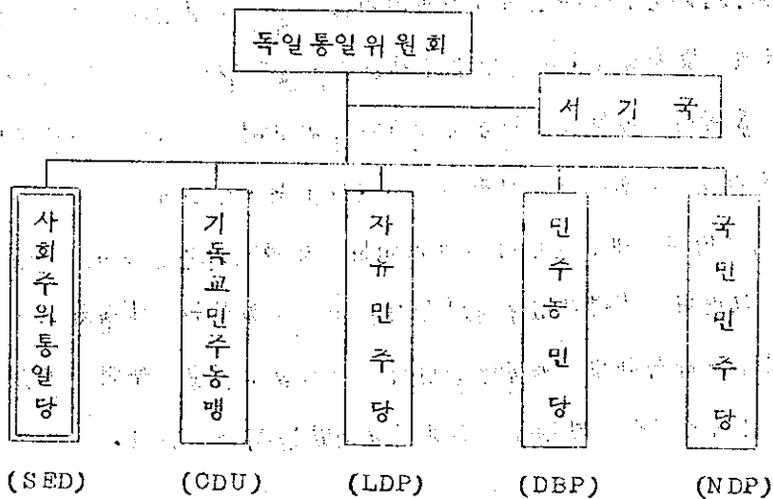


나. 동독의 통일기구

동독은 1954.7.7 설치된 「독일통일위원회」가 형식상으로 초당적 통일문제전문기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동독의 현 집권당인 「사회주의통일당」(공산당)을 중심으로 「기독교민주동맹」, 「자유민주당」, 「민주농민당」, 「국민민주당」 등의 규합된 초당적 기구로 행세하고 있으나 사실은 「사회주의통일당」의 노선에 따라 행동하고 있을 따름이며 현재 내각의 선전기 관 역할을 하고 있다.

동 「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1)동독정권의 기본정책에 입각한 동독문제 및 강화조약 취급, (2) 반 서방적, 반 서독 선전활동, (3) 서독내의 반정부침입선동을 통한 동·서독 국가연합결정 촉구, (4) 서독 및 서방측이 주장하는 「전독자유선거」 반대운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동독의 통일기구



다. 중공의 통일공작기구

중공의 소위 「대만해방」을 위한 제반 정책수립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산하에 있는 「중앙서기처」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중앙서기처」 산하 「통일전선공작부」가 이들을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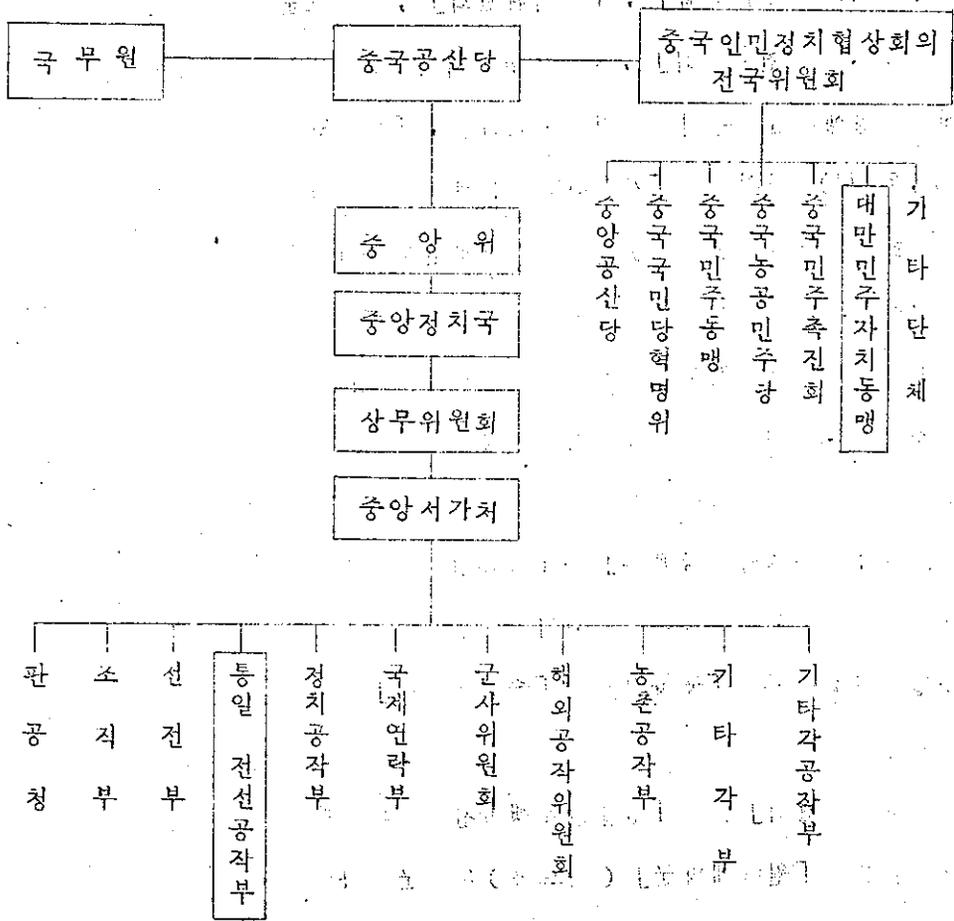
그러므로 「중앙서기처」에서 결정된 정책은 즉각 국무원(중앙행정부) 산하 각 집행기관에 지시되며 아울러 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 소위 「사회주의건설추진」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각 정당·사회단체에도 행동지시가 내려진다.

이러한 정당·사회단체로서는 중국공산당을 중심으로 「중국국민당 혁명위원회」, 「중국민주동맹」, 「중국농공민주당」(中國農工民主黨) 「중국민주촉진회」, 「대한민주자치동맹」 및 기타 군소단체들로 조직되어 있으나 이들은 모두 집중적으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접결되어 중국공산당의 정책을 집행하고 대내외적으로 선전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1947.2.28. 대만폭동사건을 계기로 하여 같은 해 11월 12일에 발족한 「대만민주자치동맹」은 「중국인민은 대만을 해방하여 중국의 통일을 완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대만의 농포들도 애국주의를 발휘하여 협력해야 한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그들이 마치 대만주민을 대표하는 정치단체인것 처럼 행봉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민주자치동맹」의 주요 임무는 「통일전선공작부」의 지휘·감독하에 중국공산당의 정책을 집행하고 특히 대만적화를 위한 조직과 선전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에 불과하다.

이러한 조직으로써 중공은 정권발족후 부터 「대만해방」 문제를 중요정책의 하나로 삼고 구력에 의한 「대만해방」을 부르짖고 언 안도서에 대한 포격 등 침공태세를 취하기도 했으나 1955년 5월 부터 태도를 완화하여 가능한(조건하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대만을 쟁취하고자 협상을 제의해 보기도 하였다.

중공의 통일공작체통



라. 월맹의 통일공작기구

월맹의 대월남적화통일공작은 월맹노동당(공산당) 중앙위원회 산하 「통일부」가 총지휘하고 있는데 「통일부」가 수립한 제반 정책은 월맹노동당의 공식정책으로써 「남부월남공작본부」에 하달되며 이것은 다시 구체적인 행동명령 형태로 「월남민족해방전선」에 전달된다.

그리고 「월남민족해방전선」은 언제라도 정부형태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군사위원회」, 「대외연락위원회」, 「경제위원회」, 「정보문화위원회」, 「교육위원회」, 「보건위원회」, 등이 설치되어 있고 동시에 중앙위원회 밑에 지방행정을 위한 「지역위원회」, 「성위원회」(省委員會) 및 군(郡), 촌(村) 단위의 「지구위원회」까지 조직되어 있어 「베트콩」이 지배하는 말단 촌락 조직까지 월맹노동당의 공작지령이 하달되고 집행된다.

이러한 명령계통을 통하여 월맹노동당은 「월남민족해방전선」의 사상교육, 정치훈련, 선전활동, 반정부운동 및 기타 정치공작을 배후에서 지도하고 있다.

월맹노동당 → 「통일부」 → 「남부월남공작본부」 → 「월남민족해방전선」의 수직명령계통을 보조하고 있는 월맹내의 횡적 기관으로서 월맹각료회의 산하 「통일위원회」와 「국방성」, 「중앙조사국」 등이 있다.

즉 각료회의 산하 「통일위원회」는 「월남민족해방전선」의 대외적 정치활동을, 「국방성」은 「월남해방군」(베트콩)의 군사활동을 그리고 「중앙조사국」은 대규모의 정보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월맹의 대남공작을 지원하는 민간외각단체로서 월맹 내에 「베트남조국전선」이 있어 대내외적인 선전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월남민족해방전선」에 속하는 정당 및 외곽단체로서는 65년말 현재로 27개가 있다.

이들 가운데는 「월남인민혁명당」을 포함한 3개의 정당, 3개의 종교단체 국제성을 띤 다수의 위원회 및 협회 등 사회단체들이 망라되어 있어 「월남민족해방전선」이 월남의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정당, 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지만 실은 「월남인민혁명당」을 중핵으로 한 공산세력의 규합에 불과하며, 이들은 다각적으로 월맹의 대남적화공작수행을 협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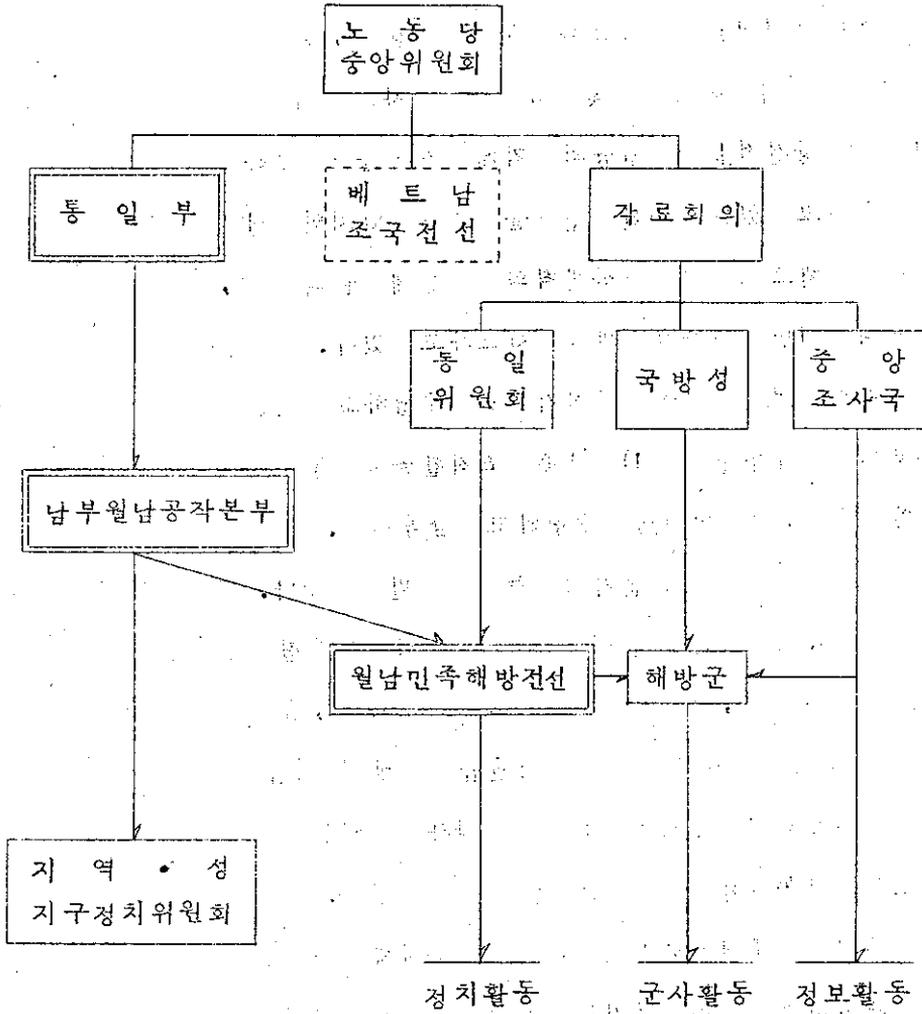
월맹노동당의 지령에 따라 대남공작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월남민족해방전선」본부의 주요임무는 (1) 각종 조직활동을 통제 조정 및 감독한다. (2) 선동, 선전방안을 수립하고 감독한다.

(3) 무력행동계획을 지시하고 군사적, 준군사적 능력을 발전시킨다. (4) 군사문제를 제외한 정치, 경제 및 사회등 제반 계획을 수립한다. (투쟁운동, 월남군의 귀순권유, 하부조직창설등) (5) 자금, 물자 및 인력을 지원한다. 등으로서 이러한 임무는 「월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이 총괄하며 「해방군」이 관장하고 있는 무력행동을 제외하고는 모든 활동상황이 「서기국」에 보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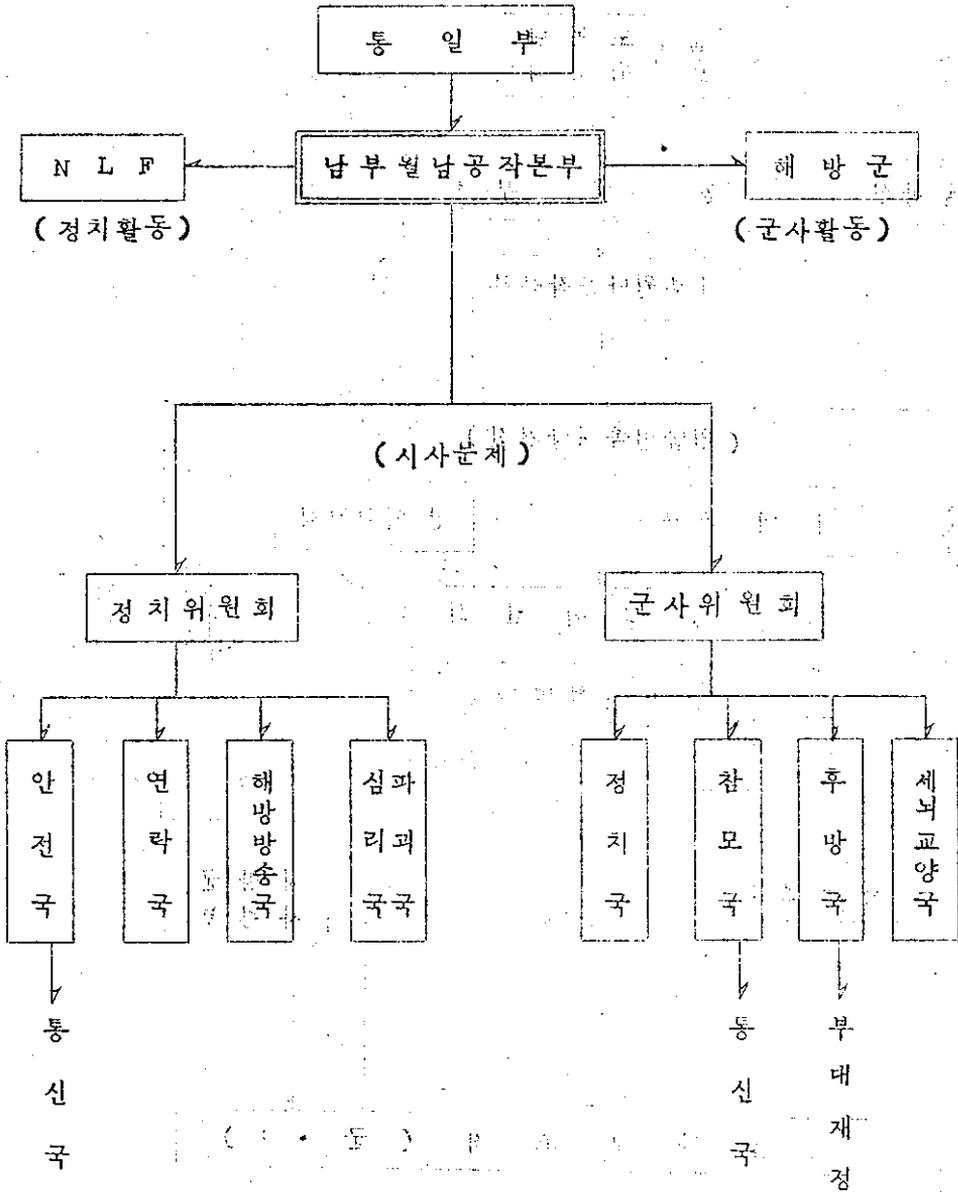
상기 「중앙위원회」 산하에는 「서기국」과 더불어 무력행위에 관한 계획과 외교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국」이 별도로 있어 「월남민족해방전선」의 외교정책 및 국제관계업무를 수행하는 「외무위원회」와 군사활동을 수행하는 「해방군사령부」를 직접 장악하

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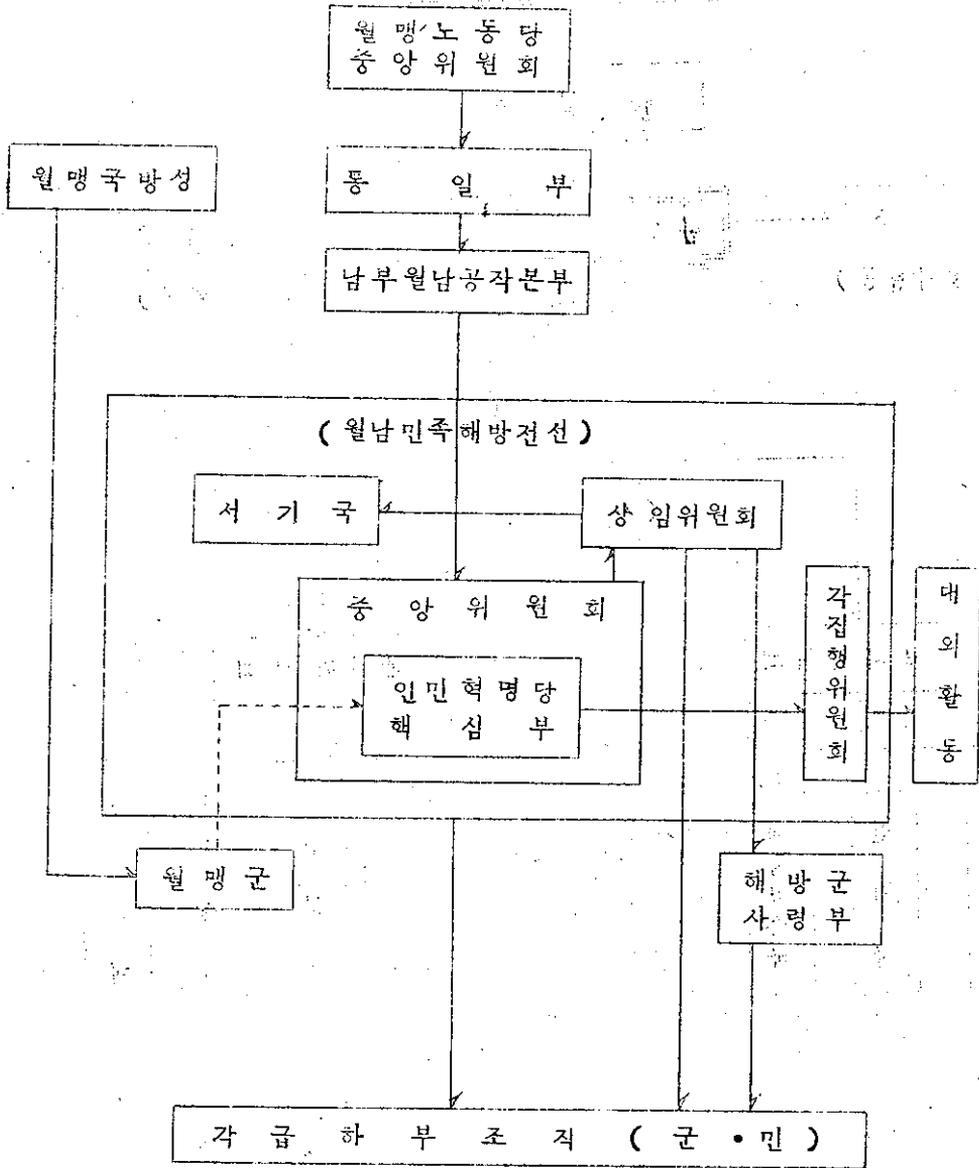
월맹의 대월남공작계통



「남부월남공작본부」조직



「월남민족해방전선」 명령계통



3. 통일문제기구의 비교

가. 우방국가

(1) 공통점

동독을 제외한 북괴, 중공, 월맹이 모두 적화통일을 목표로 항상 도발적인 적극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을 위시한 서독, 자유중국, 월남은 다 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국토통일이념을 견지하면서 가능한 통일방안의 연구, 통일후의 계획, 그리고 국민에 대한 반공교육 및 홍보활동등 소극적인 기능수행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이 공통점이며 특징이다.

(2) 차이점

그러나 분단전후의 제반 여건이 다른 서독의 경우, 「전독문제성」의 기구와 기능은 다소 특이한 성격을 띠고 있다.

즉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외교적 기능, 동독피난민 문제 등은 각각 「외무성」, 「피난민구호성」이 주관하는 대신 「전독문제성」의 기능은 (1) 동·서독을 한개의 국가단위로 본 행정업무 (2) 동독실정위 조사업무 (3) 동·서독간의 교류업무 (4) 「베르린」시의 관리 등에 대부분 한정되어 있으며 아울러 대내외적 선전활동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한국과 자유중국은 다분히 조사, 연구위주이나 서독은 행정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방국가내에서 「통일을 위한 노력」에서의 차이점을 보면 한국의 통일문제가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꾸준히 추진되어 온 반면, 서독은 구주제일의 국력과 「미·영·불」 3국의 협조를 기반으로 하여 「대소외교」를 통해서 동독분제를 타개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한편 자유중국은 무력에 의한 본토수복을 원칙으로 삼고, 과

거에 본토에서 저지른 국민당정부의 과오를 반성하면서 대륙수복을 위한 총력전에 임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나. 공산진영

(1) 공통점

북괴를 포함한 중공·동독·월맹 등의 통일공작기구가 한결 같이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목표로 공산당을 정점으로 조직, 운영되고 있고 오직 당에서 결정한 정책과 명령을 살전하는데 급급하며, 이를 위해서 당의 부속기관에 불과한 각종 외각단체를 표면에 등장시켜 최대한의 선전목적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 공통점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공산진영의 통일공작기구는 항상 각종 정당, 사회단체들로 규합된 「통일전선」을 앞세워 마치 초당적이며 범국민적 통일운동체인양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또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새로운 단체를 조직하거나 규합된 단체를 해체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이 있는 반면 그들의 조직과 대외활동등 여러가지 면에서 다소의 차이점과 특징들을 엿볼 수가 있다.

(2) 차이점

<기구 및 조직>

북괴의 「대남사업총국」, 중공의 「통일전선공작부」, 월맹의 「통일부」 등이 각각 「당중앙위원회」 산하에서 핵심적인 통일공작을 수행하고 하부조직과 외각단체들의 기능을 조정·감독하고 있으나 동독만은 좌익정당의 연합체인 「독일통일위원회」 내에서 「사회주의 통일당」(공산당)이 중심이 되어 그 기능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특히 하부조직을 보면 월맹은 월남 내에 소위 「인민혁명당」을

중심으로 한 「월남민족해방전선」이라는 정치조직과 「해방군」이라는 전투조직을 구사하고 있는데 비하여 북괴는 남한에 그러한 공작조직을 구축하지 못하고 다만 「사회안전성」 산하 「재일조선인지도부」를 통한 대남우회공작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며 중공과 동독은 하부조직의 활동이 빈약하다.

< 통일 구호 >

북괴가 위장된 「평화통일론」을 크게 내세우고 있으나 중공과 월맹은 각기 「무력에 의한」 「대만해방」과 「사이공」 정부 타도를 부르짖고 있다. 한편 동독은 적극적인 통일에의 노력을 전개할 실력이나 여유는 없고 오히려 「분단상태의 존속」을 바라는 나머지 「동서독 양 정부의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다.

< 국가 개념 >

북괴는 남북한에 「실제로 두개의 정부가 존재한다」는 것을 해외적으로 사실화하려고 부심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독이 「독일에 두개의 독일정부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점이며, 다만 동독이 서부(베를린)서부 별개의 정치단위로 규정하려는 점이 조금 색다를 뿐이다. 그러나 중공과 월맹은 각기 자유중국과 월남공화국의 존재를 묵살하고 있다.

< 상호 교류 >

상호교류 문제에 있어서 북괴는 오래전부터 남북교류를 적극적으로 제의해 왔는데 비하여 동독은 서독과의 협정에 입각한 인적,

물적 교류를 장기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공과 월맹은 교류문제에 관해서는 지극히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결 론>

금년 3월 1일 처음 발족한 우리 「국토통일원」은 같은 분단 국가인 서독이나 자유중국의 통일문제전담기구들에 비하여 그 기구의 규모나 연륜등 여러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허다하다고 보겠다.

우선 무엇보다도 서독의 20년의 역사를 쌓은 「전독문제성」의 연간예산이 약 1억불(68년도)에 공식직원이 330여명이나 된다는 점, 그리고 15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자유중국의 「광복대륙설계연구위원회」는 비상임연구위원 1,600여명을 거느리고 있고 사무직원만도 150여명이나 된다는 것은 총인원 45명과 9,500만원의 예산으로 출발한 우리 「국토통일원」의 운영면에서 볼 때 여러모로 검토 비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상가 우방국가들의 통일문제전담기구가 쌓아 올린 장기간의 실적과 경험을 참고로 한정된 인원과 예산이나마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야 하겠다. 이는 곧 우리의 지상목표인 국토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기도 하다.

< 참고 문헌 >

1. 양단된 국가의 통일문제
- 백행걸 저 1968. 대한공론사 -
2.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연구
- 이승헌 저 1968. 아세아문제연구소 -
3. 북(北)
- 조천성 저 1969. -
4. 북괴현황
중공현황
월명현황
- 국제문제연구소 1968. -
5. 세계 각국 편람 (4)
- 국방대학원 1961. -
6. 광복대륙설계연구위원회 현황
- 국토통일원 1969. -

< 圖書目錄 >

- 1. 國語 國語學 國語學概論 1
- 2. 國語 國語學 國語學概論 2
- 3. 國語 國語學 國語學概論 3
- 4. 國語 國語學 國語學概論 4
- 5. 國語 國語學 國語學概論 5
- 6. 國語 國語學 國語學概論 6
- 7. 國語 國語學 國語學概論 7
- 8. 國語 國語學 國語學概論 8
- 9. 國語 國語學 國語學概論 9
- 10. 國語 國語學 國語學概論 10
- 11. 國語 國語學 國語學概論 11
- 12. 國語 國語學 國語學概論 12
- 13. 國語 國語學 國語學概論 13
- 14. 國語 國語學 國語學概論 14
- 15. 國語 國語學 國語學概論 15
- 16. 國語 國語學 國語學概論 16
- 17. 國語 國語學 國語學概論 17
- 18. 國語 國語學 國語學概論 18
- 19. 國語 國語學 國語學概論 19
- 20. 國語 國語學 國語學概論 20